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전자정부정책과
 행정안전부	2018년 11월 19일(월) 조간 (11. 18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이세영 서기관 권창현
		연락처	02-2100-3902 02-2100-3908

중앙부처 · 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.

- 행정안전부,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-

-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“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”을 위해 중앙부처,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,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 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.
-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,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-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, 지능형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개 기관으로부터 52개 과제를 제출받았다.

- 기관 수요조사 결과, 과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업무 및 법규 안내, 민원상담 등에 인공지능,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으로 나타났다.
- 다음으로 국민생활, 재난/재해, 범죄예방, 시설물 등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, IoT 등 지능정보기술과 CCTV 등 기반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가 많았으며, 독거노인, 취약 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 부정수급 방지 등 블록 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다수 제출되었다.
-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, 법·제도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한편,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고, 여러 기관으로 확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집중 논의하여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학계, 업계등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별 제출과제를 보완하고, ‘국민생각함’과 ‘국민디자인단’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.
-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“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자정부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 “무엇보다 정부가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